

2024년 11월 17일 시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모의고사(11회)]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

【응시직렬(직렬코드)】

· 일반행정직 (600)	· 사회복지직 (668)	· 교정직 (650)	· 교육행정직 (620)
· 마약수사직 (664)	· 검찰사무직 (662)	· 보호직 (661)	· 세무직 (612)
· 기술직 (670)	· 소방직(공채) (680)		

※ 반드시 본인의 응시 직렬 코드를 답안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 목】

제4·5과목	전공(2과목) : 세법개론(11) 회계학(12) 교정학개론(15) 형사소송법(16) 형사정책개론(17) 형법(19)
제1~3과목	전공(3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반드시 문제책에 기재된 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답안지에 제1·2·3·4·5과목 답안을 순서에 맞춰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통과목인 제1·2·3 과목 기재 순서에 유의하며, 전공필수과목인 제4·5과목은 과목코드 필수 표기)

※ 소방직은 과목코드 표기 없이 OMR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 순으로 응시

성적확인 및 이의제기 안내

1. 성적공개 일시

- 성적공개 : 2024. 11. 21.(목)14:00
- 온라인 성적확인 : OMR 답안지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성적 조회가 불가하니 반드시 마킹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제기 기간

- 2024. 11. 17.(일)12:00 ~ 2024. 11. 18.(월)18:00

3. 이의제기 방법

- 박문각 공무원 온라인 ▶ 모의고사 ▶ 나의 모의고사 ▶ 1:1문의 / 이의신청 게시판

4. 무료 해설강의 : 2024. 11. 18.(월) 15시 오픈

- 박문각 공무원 온라인 ▶ 무료특강 ▶ 해설강의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박문각 전국모의고사

목 차

【세 법 개 론】	-----	1
【회 계 학】	-----	5
【교 정 학 개 론】	-----	8
【형 사 소 송 법】	-----	11
【형 사 정 책 개 론】	-----	15
【형 법】	-----	18
【소 방 학 개 론】	-----	23
【소 방 관 계 법 규】	-----	26
【행 정 법 총 론】	-----	30

세법 개론 (11)

문 1.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2.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 ④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한도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나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 4. 법인세법상 세액의 징수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문 5. 국세기본법 중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문 6. 국세징수법 중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 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중 3회 이상의 체납횟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 제한요구 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문 7.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③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금액 각각에 대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각각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 ②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 항행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사업자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상호주의)과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포함)는 영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 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이 법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계산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공동사업자가 각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간에 특수관계여부와 관련 없이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④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 17.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18.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문 19. 국세징수법상 공매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자에게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매예정가액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이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 20.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개량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일반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손금산입 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 계 학 (12)

- 문 1.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②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④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 문 2. 회계기준에 제시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기업의 자원과 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만 경영진의 책임이행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 ③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개념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 ④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문 3. 다음은 (주)한국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매출채권(총액)	₩500,000	₩540,000
손실충당금	(₩80,000)	(₩50,000)
매출채권(순액)	₩420,000	₩490,000

- (주)한국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으로 ₩40,000을 보고하였으며, 20×2년 외상매출액은 ₩1,800,000이다. 20×2년에 (주)한국이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 금액은?
- ① ₩1,690,000
 - ② ₩1,720,000
 - ③ ₩1,760,000
 - ④ ₩1,830,000

- 문 4. (주)한국은 20×1년 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이자조건의 자금 ₩100,000을 차입(20×4년 말 전액 일시상환)하여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상각)를 취득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 20×1년 초 인식할 정부보조금은? (단, (주)한국이 20×1년 초 금전대차 거래에서 부담할 시장이자율은 연 8%이고,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8%)
4	0.7350

- ① ₩25,000
 - ② ₩26,500
 - ③ ₩73,500
 - ④ ₩100,000
- 문 5. (주)한국의 20×1년 재무자료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익잉여금은?

○기초 자본금	₩500,000	○기초 이익잉여금	₩380,000
○매출액	₩2,000,000	○매출원가	₩1,500,000
○광고선전비	₩160,000	○종업원 급여	₩240,000
○배당금지금액	₩70,000	○신주발행금액	₩150,000

- ① ₩100,000
 - ② ₩410,000
 - ③ ₩480,000
 - ④ ₩630,000
- 문 6. (주)한국은 20×2년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20×2년도의 기초 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각각 ₩35,000과 ₩42,000만큼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변경의 요건을 충족한다. 만일 회계정책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주)한국의 20×2년 당기순이익은 ₩200,000이다. 회계정책변경 후 (주)한국의 20×2년 당기순이익은?
- ① ₩193,000
 - ② ₩207,000
 - ③ ₩235,000
 - ④ ₩242,000

- 문 7. (주)한국은 장부금액 ₩3,500,000의 토지를 제공하고 공정가치가 ₩2,500,000인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현금 ₩2,000,000을 추가로 받았다.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주)한국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손익은?
- ① 처분손실 ₩1,000,000
 - ② 처분손실 ₩500,000
 - ③ ₩0
 - ④ 처분이익 ₩1,000,000

- 문 8.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 ②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③ 투자부동산을 재개발하여 미래에도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개발기간 동안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 ④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할 때 전체 계약에서의 해당 용역의 비중이 중요한 경우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문 9. (주)한국은 20×1년 초 공장 신축공사(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000,000)를 수주하였으며,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20×1년	20×2년	20×3년
발생 누적계약원가	₩700,000	₩4,200,000	₩7,000,000
추가소요예정원가	6,300,000	2,800,000	-

- ① ₩350,000 ② ₩500,000
- ③ ₩600,000 ④ ₩800,000

- 문 1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00을 지급하고, 매 연도말에 ₩300,000씩 3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입채무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고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주)한국이 3년간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총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0.9259	0.8573
	0.7938	0.9259
	1.7833	2.5771

- ① ₩61,860 ② ₩98,100
- ③ ₩126,870 ④ ₩226,870

- 문 11. (주)한국의 20×1년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영업이익은?

○기초재공품재고액 ₩50,000	○기말재공품재고액 ₩70,000
○기초제품재고액 ₩80,000	○기말제품재고액 ₩90,000
○당기총제조원가 ₩60,000	○매출액 ₩45,000
○판매관리비 ₩10,000	

- ① ₩5,000 ② ₩10,000
- ③ ₩15,000 ④ ₩20,000

- 문 12. (주)한국은 단일의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두 가지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제품 A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나, 결합제품 B는 분리점에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된다. (주)한국의 20×1년도 제품별 생산 및 판매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각 제품의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은 없었다.) 20×1년 중 실제 발생한 결합원가는 ₩6,000이었으며, (주)한국은 순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1년 중 결합제품 A와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제품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판매량	단위당 최종판매가격
A	800단위	-	600단위	₩10
B	500단위	₩3,500	400단위	₩15

결합제품 A 결합제품 B

- ① ₩2,000 ₩4,000
- ② ₩3,000 ₩3,000
- ③ ₩4,000 ₩2,000
- ④ ₩5,000 ₩1,000

- 문 1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초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세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 ③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 ④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 문 1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3년 만기,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액면이자율은 연 8%이고,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주)한국은 사채 이자를 매년말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채발행차금은 매 회계연도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 ②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 ③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증가한다.
- ④ 2차연도말에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시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한다.

문 15. (주)한국은 수작업이 요구되는 장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새로운 장식품 A를 최초 1개 생산하는 데 10시간이 소요되었고, 추가로 3개를 더 생산하는 데는 15.6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주)한국이 장식품 A를 생산하는 데 누적평균 시간 학습모형을 적용한다면, 이 경우 학습률은?

- ① 70%
- ② 80%
- ③ 85%
- ④ 90%

문 16.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 단위 당 직접재료원가 표준은 다음과 같다.

$$\text{○ 직접재료원가} = 2\text{kg} \times \text{₩}20 = \text{₩}40$$

(주)한국은 20×1년 4월에 제품 1,100단위를 생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월 중 직접재료 2,420kg을 kg당 ₩19에 외상으로 취득하여 이 중 2,300kg을 생산에 투입하였다. 20×1년 4월 직접재료의 월초재고는 없었으며, 월초재공품과 월말재공품 또한 없다. (주)한국이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20×1년 4월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는?

- | | | |
|---|----------------|----------------|
| | <u>가격차이</u> | <u>수량차이</u> |
| ① | ₩2,000(유리한 차이) | ₩2,300(불리한 차이) |
| ② | ₩2,000(불리한 차이) | ₩2,300(유리한 차이) |
| ③ | ₩2,300(유리한 차이) | ₩2,000(불리한 차이) |
| ④ | ₩2,300(불리한 차이) | ₩2,000(유리한 차이) |

문 17. 회계기준에 제시된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가격은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다.
- ②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 ③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④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 18. (주)한국의 20×1년 건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당기 중 건물을 ₩2,000에 취득하였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건물처분이익 ₩100과 건물 감가상각비 ₩700이 보고되었다. 건물 취득 및 처분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건물 관련 거래가 20×1년 투자활동 현금흐름(순액)에 미치는 영향은?

계정과목	기초 잔액	기말 잔액
건물	₩6,000	₩6,400
감가상각누계액	1,100	1,200

- ① ₩400 유출
- ② ₩800 유출
- ③ ₩900 유출
- ④ ₩1,000 유출

문 19.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결산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 거래로 인한 수정후자산표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년 중 선급임차료로 회계처리한 ₩1,200,000에서 ₩900,000은 20×1년 분 임차료이다.
- 12월분 공과금 ₩200,000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공과금 납부일은 익월 15일이다.
- 20×1년 중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500,000에서 40%는 20×1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① 자산 ₩900,000 감소
- ② 부채 ₩200,000 증가
- ③ 비용 ₩1,100,000 증가
- ④ 수익 ₩200,000 증가

문 2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금”이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② “국고금회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과 다른 별도의 회계로서 국고로 불입되어 관리되는 수입, 예산의 배정에 따른 지출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등 국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나의 회계에서 모아 회계처리하기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 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 ④ 국세수입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교정학개론 (15)

- 문 1.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조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 ② 조선 시대 형벌인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 ③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 행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 ④ 미군정 시대에는 수용자 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 ④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 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처우를 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 ② 형기가 3년 이하인 수형자
 - ③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수형자
 - ④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수형자
- 문 4. 누진계급 측정방법의 명칭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점수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행형성적을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라고도 하며, 진급과 가석방 심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진급이 교도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다.
 - ② 고사제: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하는 수형자에게 고사급, 제3급, 제2급, 제1급, 특별급의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상급에 진급함에 따라 우대를 더하는 방법으로 진급에는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다.
 - ③ 엘마이라제: 누진계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 작업, 교육 및 행장에 따라 매월 각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였을 때 제1급에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 ④ 잉글랜드제: 수형자가 매월 취득해야 하는 지정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책임점수제라고도 하며, 진급척도로서의 점수를 매일이 아닌 매월 계산한다.
-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물품지급과 금품관리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장은 보관품이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ㄷ.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수용자의 물품을 팔 경우에는 그 품목·수량·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ㄹ
-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및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지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 ㄴ.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ㄷ.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ㄹ. 소장은 수행자가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ㅁ.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상 중경비처우급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 ① ㄱ,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 ②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③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④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집행의 정지·면제·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문 1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의 시설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④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민영교도소의 수입으로 한다.

문 13.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e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14.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 ② 범죄행위의 학습내용에는 범행 기술뿐만 아니라 동기, 합리화, 태도 등도 포함된다.
- ③ 사람은 자신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특정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이것이 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문 15.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②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문 16.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③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7.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부는 죄를 범한 소년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④ 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문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ㅁ.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ㄹ, ㅁ
- ③ ㄴ, ㄷ, ㄹ, ㅁ, ㅂ
- ④ ㄱ, ㄴ, ㄷ, ㄹ, ㅁ, ㅂ

문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 ③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보호소년 등에게 지정된 실 안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문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③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④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형사소송법 (16)

문 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1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변호사범위반죄에 해당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범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 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위법하다.

문 3. 증거동의를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를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문 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③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 ④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7.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ㄷ.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ㄹ.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8.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할 수 있다.

문 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문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문 11.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 ②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 ④ 토지관할에 있어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문 1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문 1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문 14.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상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15.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16.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② 변호인의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문 1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ㄴ.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ㄷ.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ㄹ.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ㅁ.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②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19. 형사소송법상 강제체혈이나 강제채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압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ㄷ.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ㄹ.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지만,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채뇨요구는 독립적인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0.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정책개론 (17)

- 문 1.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보형주의에 따르면 범죄는 정의에 반하는 악행이므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
 - ②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고방식이다.
 - ④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죄자를 교육·개선함으로써 그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사고방식이다.

문 2.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케틀레(A. Quetelet)는 암수범죄와 관련하여 반비례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공식적 통계상의 범죄현상은 실제의 범죄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ㄴ. 자기보고조사는 범죄자가 자기가 범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ㄷ. 범죄피해자 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피해자가 범죄피해가 없었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이 결여된다.

ㄹ. 정보제공자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게 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ㄴ, ㄷ

- 문 3. 범죄피해자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해자 중심의 범죄통계표는 범죄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은 범죄피해자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② 격증하는 성범죄는 범죄피해자학의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되어 있고, 범죄피해자학은 양형의 적정화에도 기여하는 일면이 있다.
 - ③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내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피해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소위 간접피해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범죄피해자의 유형 중에서 비행적 피해자는 사기죄의 경우 많이 나타날 수 있다.

- 문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료명령의 대상자는 심신상실자와 알코올중독자 및 약물중독자이다.
 - ②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전에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 5. 코헨(L. Cohen)과 펠손(M. Felson)의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범죄원인론과 유사하다.
 - ② 어느 시대나 사회에도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의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③ 범죄의 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절한 범행대상(합당한 표적)과 보호능력의 부존재(감시의 부재)라고 본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 문 6.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탈행위의 원인은 유아기의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다.
 - ② 인간의 무의식은 에고(Ego)와 슈퍼에고(Superego)로 구분된다.
 - ③ 이드(Id)는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 욕망 등을 요소로 하는 것이다.
 - ④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고 이드의 충동을 억제한다.

- 문 7. 베카리아(Beccaria)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 ② 사형은 예방 목적의 필요한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 ③ 처벌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처벌의 가혹성에 있다.

문 8.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② 벌금은 상속이 되지 않으나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벌금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 받을 수 있다.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문 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적 수준에서의 열망(aspiration)과 기대(expectation) 간의 괴리로 인해 긴장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 ② 아노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주된 연구들은 거시적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 ③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통해 범죄가 유발된다.
- ④ 자신에게 중요한 이성 친구와의 결별이나 실연, 친한 친구나 가족의 사망 등은 긍정적 자극이 소멸한 예라 할 수 있다.

문 10.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류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헨(Cohen)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 ② 하류계층의 대체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는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며,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 ③ 하류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따르는 동조행위라고 보았다.
- ④ 하류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하였다.

문 1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②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 우호적 정의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 ③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범죄의 기술,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도 함께 학습된다.
- ④ 금전적 욕구, 좌절 등 범죄의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별해 주는 변수가 된다.

문 12.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제시한 중화의 기법 중 ‘(A) 책임의 부정’과 ‘(B) 상위의 충성심에 호소’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어쩔 수 없었잖아.
 ㄴ. 난 단지 그것을 잠시 빌린 것뿐이야.
 ㄷ.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잖아.
 ㄹ. 나는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훔쳤어.

- | | (A) | (B) |
|---|------|-----|
| ① | ㄱ | ㄴ |
| ② | ㄱ | ㄷ |
| ③ | ㄱ, ㄴ | ㄷ |
| ④ | ㄱ, ㄷ | ㄹ |

문 13.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이 2차적 일탈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 ② 베커(Becker)는 일탈자의 지위는 다른 대부분의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지위가 된다고 하였다.
- ③ 중요한 정책으로는 다이버전,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 있다.
- ④ 사회 내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설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14.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 ②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문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 ③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 ④ 보호소년 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문 16.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②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건을 송치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④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문 17. 아동이나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 20세 미만인 자
-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 18세 미만인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 ④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문 18.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소년의 연령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범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 ②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 ④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은 법률에서 정한 부착기간의 2배로 한다.
- ③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문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 ②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문 5.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甲이 위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기소된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
- ②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일치한다.
- ④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문 6.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 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문 7.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죄와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하고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④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문 8.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문 12.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열성이 우수하여 고온에서 수성막의 형성이 용이하다.
 ② 기름에 의한 오염이 적다.
 ③ 다른 소화약제와 병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이다.

- 문 13. 인화성 촉진제인 휘발유의 위험도로 옳은 것은? (단, 휘발유의 연소범위는 1.4vol.%~7.6vol.% 이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0.82
 ② 4.43
 ③ 6.20
 ④ 6.43

- 문 14.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물에서 연기를 이동시키는 주요 추진력은 굴뚝효과이다.
 ② 알코올이 완전 연소될 경우에 연기의 색은 진한 검정색을 띤다.
 ③ 건물 내에서 연기의 수평방향 확산속도는 약 0.5~1m/s이다.
 ④ 연기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다.

- 문 15.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가스를 발생한다.
 ② 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반응을 일으키며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③ 황린이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여 오황화인이 발생된다.
 ④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범위는 약 2.5~81%이다.

- 문 16. 폭굉(Deton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온도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반비례한다.
 ② 화염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③ 압력은 수 기압 정도로 정압이다.
 ④ 전달에너지는 연소열에 기인하며, 충격파는 없다.

- 문 17. 최소발화에너지와 압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소발화에너지 = $\frac{1}{2}CV = \frac{1}{2}QV^2$ 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압력이 클수록 최소발화에너지는 증가한다.
 ③ 압력이 클수록 최소발화에너지는 감소한다.
 ④ 압력과 관계없이 최소발화에너지는 일정하다.

- 문 18. 화재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급화재는 일반 가연물의 화재로, 주로 나무, 종이 등의 물질이 타며 연기의 색은 주로 흑색이다.
 ② B급화재는 유류의 화재로 착색 색상은 황색이다.
 ③ C급화재는 전기화재로, 화재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과전류에 의한 열과 단락에 의한 스파크가 있다.
 ④ D급화재는 금속화재로, 수계 소화약제로 소화할 경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 문 19.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가)m²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나)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다)m²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나)	(다)
①	600	50	500
②	600	50	1,000
③	800	100	500
④	800	100	1,000

- 문 20. 분진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소속도나 초기 폭발압력은 가스폭발에 비해 작으나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타는 정도가 크다.
 ② 최대 폭발압력 상승속도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과 발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폭발성 분진의 종류 중 금속류에는 Al, Mg, Zn, Fe, Ni, Si 등이 있다.
 ④ 입자표면이 산소에 대하여 활성이 있는 경우 폭발시간이 짧아지고 폭발성이 낮아진다.

- 문 21.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학적 활성도가 큰 가연물일수록 연소가 용이하다.
 ② 조연성 가스는 가연물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체이다.
 ③ 열전도율이 작은 가연물일수록 연소가 용이하다.
 ④ 흡착열은 가연물의 산화반응으로 발열 축적된 것이다.

- 문 22. 목조건축물의 화재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 최성기 시점의 온도는 내화 건축물 화재보다 낮고, 화세도 더 약하다.
 ② 화염의 분출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하기 어렵다.
 ③ 습도가 낮을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다.
 ④ 화재 최성기 이후 비화에 의해 화재확대의 위험성이 높다.

- 문 23. 스프링클러설비 종류에서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은 수압,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스프링클러설비는?
- ① 건식스프링클러설비
 - ②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 ③ 습식스프링클러설비
 - ④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 문 2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연소물의 피해가 적다.
 - ② 표면화재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 ③ 전기 절연성이라 전기화재에 효과가 적다.
 - ④ 변질 및 동결우려가 없다.
- 문 25.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자연낙차의 압력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가수조방식이라 한다.
 -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구경은 40mm의 단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관계법규

- 문 1.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할 때 근거 법령이 다른 것은?
- ① 소방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
 - ②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한 사항
 - ③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 ④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

- 문 2.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③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목조건물이 있는 지역
 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ㄷ.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 문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소방지원활동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이 다른 것은?
-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②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③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④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문 5.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제처분 조치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 문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협력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③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 ④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 문 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관서장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관계인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화재조사관 자격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문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예방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등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는 금지행위이다.
- ② 소방관서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에서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장은 제조소등에서 옮긴물건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②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③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④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문 12.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내용이다. 밑줄 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제조소등
-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
-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문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 ① 화재안전성능 ② 화재안전조사
- ③ 화재예방진단 ④ 성능위주설계

문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것은?

- 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화재시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②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
- ③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④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둔다.
 - ②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 ②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 ③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에 설치해야 한다.
- 문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설계업의 보조기술인력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②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③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④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문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 ②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③ 호스릴 방식을 포함한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
 - ④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문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과 그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 ④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실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문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자의 기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기술사는 기계분야·전기분야 특급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기계분야·전기분야 특급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기계분야 특급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전기분야 특급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상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규정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하며,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문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 평가로 실시한다.
- ② 최초평가는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다.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 ④ 수시평가는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문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같은 것 끼리 묶인 것은?

- | | | |
|-----------|------------|---------|
| ㄱ. 과염소산염류 | ㄴ. 과염소산 | ㄷ. 질산염류 |
| ㄹ. 질산 | ㅁ. 차아염소산염류 | |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의 감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④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권자로 옳지 않은 자는?

- ① 소방청장
- ② 시·도지사
- ③ 소방본부장
- ④ 소방서장

행정법총론 (소방직)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일 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④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문 3.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 ②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문 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의견청취절차의 예외사유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체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행정절차법」상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문 5.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문 6.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문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이후에는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④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문 8.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9.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도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

문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1.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관련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③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그 의제의 대상이 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인·허가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문 12.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3.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 ②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문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②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지위승계 전에 불법증차에 관하여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을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문 20.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③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문 2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②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③ 비상사 또는 위협이 절박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2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④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문 2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②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24.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④ 공무원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문 25.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인이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관해 체결한 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③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④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급여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헌법을 통하여 직접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에 해당한다.